

Regional Changes in Large Firm Employment and Their Impacts on Wages

Myungho Paik*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mainly the income and wage effects of regional changes in large firm employment. The fraction of workers in a large firm with 300 or more employees varies by region, and also changes differently over time. Constructing the regional panel dataset, I estimate the effects of large firm employment on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GRNI) and personal income (PI), and find some positive effects on per capita GRDP and GRNI while finding no significant effect on PI. In addition, the increase in large firm employment seems to affect wages in small firm employees negatively. This result is confirmed by the individual panel data analysi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 find that the fraction of large firm employees in regional labor markets has a negative impact on wages overall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show that enhancing large firm employments would not be enough to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residents. The regional policy-maker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large firm employment on small firm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rsons when designing a regional economic policy.

Keywords

Regional Labor Markets, Firm Size, Employment, Wage Gap, Fixed Effect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Email: mpaik@hanyang.ac.kr.

지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고용 변화의 임금 효과

백명호*

한양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고용비율의 소득 및 임금 효과를 분석한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연도별 변화 추세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활용한 시도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 대기업 고용비율과 고용규모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또는 지역총소득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개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기업 고용비율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개인 수준의 노동패널 자료의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데 개인 및 일자리의 특성을 통제한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지역 노동시장의 대기업 고용비율은 전반적으로 임금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성장이 직접적으로 개인소득 및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 기업 투자 유치 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지역 노동시장, 기업규모, 고용, 임금격차, 고정효과 모형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부교수. 이메일: mpaik@hanyang.ac.kr.

I. 서론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¹⁾ 또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는 지역 경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과 고용 증대가 주요 정책으로 선거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유치가 지역의 고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지역 내 연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노동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면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경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직종 및 산업 등의 일자리 특성을 통제 한 후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국내외

1)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2004~2008년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부터 제5차 5개년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balance.go.kr/>).

실증연구들이 많이 있다 (김주영 외, 2008; 조동훈, 2009; 문영만, 2019; Brown and Medoff, 1989; Dunne and Schmitz, 1995; Oi and Idson, 1999). 한 지역에서 대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다. 만약 지역 노동시장이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고 기업이 고용 의사결정에 유효한 선별(screening)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채용되고 생산성이 낮을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채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시장 이론에 따라 임금이 생산성을 반영한다면 지역 내 대기업 고용비율의 증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 고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교통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유치가 지역 내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 경제정책으로 상정되고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이 과연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²⁾ 주되게는 기업의 투자로 인해 나타날 고용의 변화가 지역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특정 지역의 투자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외에도 민간기업 자체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되는 종사자들의 비율에 주목한다. 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고용과 소득 및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업 고용비율의 변화가 전반적인 임금 수준 및 중소기업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기업

2) 그 외 지역 경제정책으로는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 정책,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유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그 정책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타 지역 경제와 여러 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이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서술한다. 우선 제2절은 기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제3절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 자료 구성에 대한 설명과 실증분석 방법을 다룬다. 제4절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간략히 다룬다.

II. 기존 연구의 고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임금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연구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의 크기는 성별 임금격차만큼이나 큰 것으로 드러난다 (Garen, 1985; Brown and Medoff, 1989; Dunne and Schmitz, 1995).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김주영 외, 2008; 조동훈, 2009; 문영만, 2019). 김주영 외(2008)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횡단면 자료 대신 개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격차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론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주로 종사자들의 생산성 차이, 근로 환경의 차이, 노동조합 회피 노력, 고임금 지급 여력, 감독비용(*monitoring costs*) 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Oi and Idson, 1999; 김주영 외, 2008).³⁾

이들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지역별 임금의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지역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임금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우영, 2012; 이종수, 2017; 허식, 2007).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대기업 고용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기업 고용이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평균 임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노동시장의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 구조의 차이가 개인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 연구의 주제는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의 분석이 아니므로 이들 요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Oi and Idson(1999), 김주영 외(2008) 등의 연구는 이들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III. 연구 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

1. 연구 자료

1) 광역시도 패널 자료의 구성

우선 광역시도의 기업규모별 고용비율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⁴⁾ 각 시도별 소득 관련 변수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통계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여기서는 지역 경제의 성과 지표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그리고 개인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모든 자료의 명목 금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금액으로 환산한다.

광역시도별 임금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통계를 활용한다. 통계청 KOSIS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며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시간과 상용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및 상용특별급여를 활용하여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을 계산한다. 추가로 명목 임금을 2020년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임금으로 환산 후 활용한다.

추가적인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통제하는 설명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다. 광역시도별 및 각 소집단별 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 여성 비율,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 비율 및 청년(15~29세) 비율을 계산하여 생성하고, 시도별 실업률과 함께 광역시도 패널 자료에 통합한다.

4) 광역시도 자료들은 통계청 KOSIS에서 구할 수 있다(<https://kosis.kr>),

2) 노동패널 자료의 활용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와 지역 노동시장 고용구조의 임금 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성별, 학력, 근속기간, 직종, 산업 등의 개인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임금 효과 분석을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 2009 통합표본에서 2009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12차~22차 자료를 활용한다. 전체 자료 중 임금근로자의 경우로 한정하고 임금 및 기업규모 등 주요 변수의 값이 누락되지 않은 52,025개의 관측치를 연구에 이용한다.

2. 실증분석 방법: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1) 광역시도 고정효과 모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에서 대기업 고용의 변화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및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횡단면 자료 혹은 통합자료를 이용한 통상적인 회귀분석은 관측되지 않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누락 변수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패널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광역시도 패널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는 모형은 시도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다음의 회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ln y_{st} = \alpha + \beta E_{st} + X_{st}\gamma + \delta_s + \tau_t + \epsilon_{st} \quad (1)$$

위 식(1)에서 y_{st} 는 광역시도 s 의 연도 t 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및 시간당임금을 나타내며 각 변수의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E_{st} 는 주된 설명 변수로 300인 이상 규모 기업 고용비율, 1,000인 이상 규모 기업 고용비율 등 대기업 고용 관련 변수를 나타낸다. 일부 모형에서는 고용 규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 종사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변수로 활용한다. X_{st} 는 통제 변수들을 대표하며 시도별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 비율, 전문대졸 이상 비율, 15~29세 청년 비율 등을 포함한다. δ_s 와 τ_t 는 각각 시도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ϵ_{st} 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고정효과 모형의 일반적인 가정을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인구 및 경제 규모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므로 모형을 추정할 때 시도별 경제활동인구의 평균값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개인 패널 자료의 고정효과 모형

대기업 고용비율과 임금의 관계를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미시적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광역시도 수준의 총합과 평균값을 활용하여 구성된 패널 자료 분석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식(1)의 고정효과 모형을 개인 수준으로 확장하여 개인의 시간당임금 w_{ist} 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ln w_{ist} = \alpha + \beta_1 FS_{ist} + \beta_2 E_{st} + X_{ist} \gamma + \delta_s + \tau_t + \theta_i + \epsilon_{ist} \quad (2)$$

$$\ln w_{ist} = \alpha + \beta_1 FS_{ist} + \beta_2 E_{st} + \beta_3 FS_{ist} * E_{st} + X_{ist} \gamma + \delta_s + \tau_t + \theta_i + \epsilon_{ist} \quad (3)$$

여기서 대기업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우선 위 식 (2)에서 FS_{ist} 개별 임금노동자 i 의 현 직장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의미한다. 2000년대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김주영 외(2008)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그리고 1,000인 이상을 나타내는 다섯 개의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다.⁵⁾ 또한, 앞서 광역시도 모형에서 생성한 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비율 변수 E_{st} 를 지역 고용 구조를 대표하는 변수로 추가하여 개인의 현 직장 소재지(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X_{ist} 는 개인의 혼인 상태, 학력,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종, 산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포함하는 통제 변수의 벡터이다. 개인들의 관측되지 않는 고정효과는 θ_i 를 추가하여 통제한다. 식 (3)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현 직장 규모 더미 변수들과 지역 대기업 고용비율 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지역 고용 구조의 영향이 노동자의 현 직장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대기업 고용과 소득 및 임금

1. 대기업 고용 변화와 소득

1) 대기업 고용비율의 변화

표1은 광역시도 패널 자료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체 관측치는 224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2006~2019년 관

5) 다른 방식으로 기업규모 더미 변수들을 생성하여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측치에 해당된다. 우선 전체 종사자수 혹은 기업규모에 따른 종사자수 등의 통계량은 광역시도에 따른 인구 편차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고용비율은 각 규모 사업체의 총 종사자수를 전체 규모 사업체 종사자수로 나누어 구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은 시도 및 연도에 따라 5.0%에서 23.6%로 편차가 있고 평균은 12.2%로 나타난다. 1,0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의 평균은 5.6%로 나타난다.

표1. 광역시도 패널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종사자수	224	1,187,107	1,273,711	176,648	5,302,740
300+ 종사자수	224	165,912	240,737	8,921	1,227,776
1000+ 종사자수	224	77,856	119,477	1,224	634,321
300+ 종사자 비율	224	0.122	0.042	0.050	0.236
1000+ 종사자 비율	224	0.056	0.032	0.007	0.175
실질 1인당 지역내총생산(천원)	224	32,542	11,313	17,845	68,693
실질 1인당 지역소득(천원)	224	30,397	8,121	20,011	56,122
실질 1인당 개인소득(천원)	224	17,206	2,210	13,837	24,098
실질 시간당 임금(5~299)	144	16,513	1,863	12,874	22,519
실질 시간당 임금(100~299)	144	19,349	2,474	15,145	27,990
실질 시간당 임금(300+)	144	25,761	4,886	12,447	39,216
실업률	224	0.031	0.009	0.013	0.050
경제활동 여성 비율	224	0.420	0.022	0.338	0.469
경제활동 전문대졸 이상 비율	224	0.385	0.079	0.199	0.580
경제활동 15~29세 비율	224	0.157	0.025	0.107	0.235

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통계 자료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활용 (KOSIS에서 다운로드). 시간당 임금, 지역총생산, 지역소득, 개인소득은 2020년 기준 CPI를 적용한 실질 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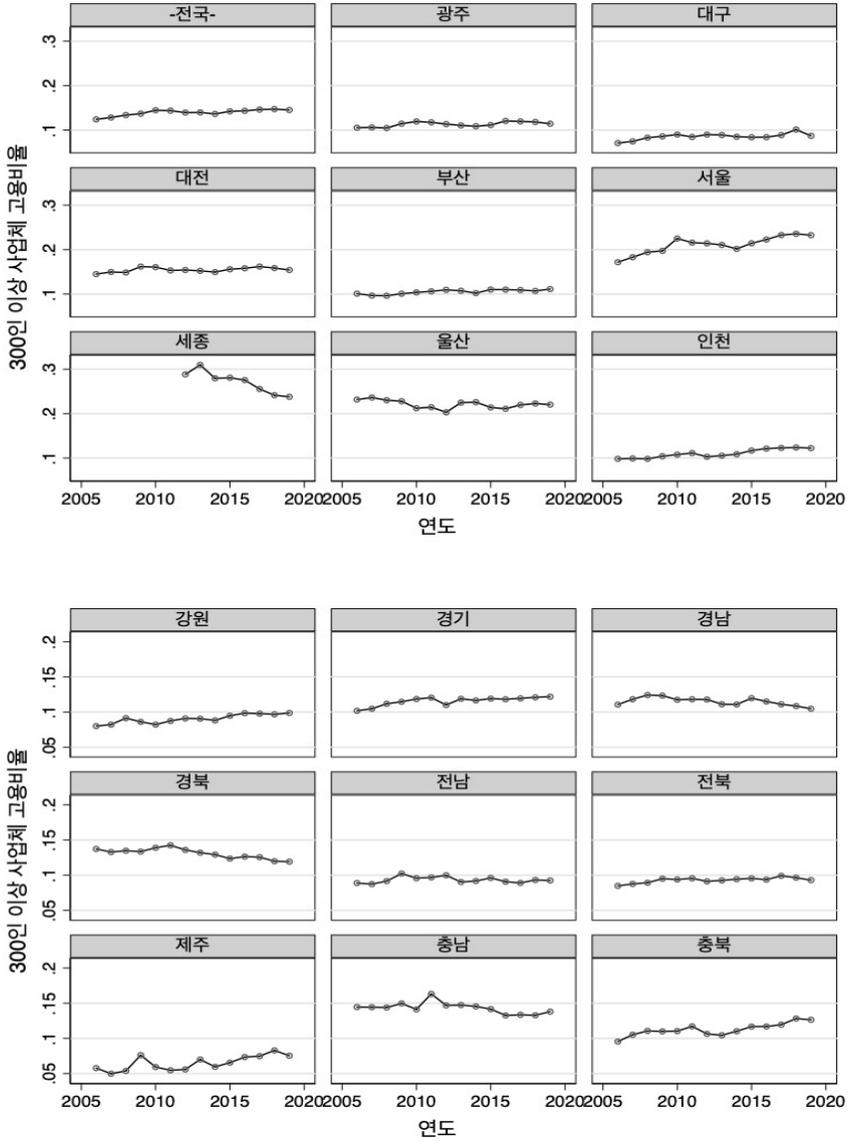
실질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 및 개인소득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은 2020년 기준 실질 값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2.5(백만원)인 반면 개인소득은 17.2로 지역내총생산의 약 53% 정도이다. 중소기업의 실질 시간당 임금은 5~299인 규모인 경우 평균 16.5(천원), 100~299인 규모인 경우 19.3인 반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25.8로 높게 나타난다. 임금 변수의 경우도 지역 및 연도에 따른 변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⁶⁾ 지역 및 시기에 따른 인적 구성의 차이와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인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 비율, 전문대졸 이상 비율, 청년 비율 등의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추가로 보고한다.

그림1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시도별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우선 전국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되는 종사자 비율의 완만한 증가 추세가 관측되지만, 각 시도별로는 상이한 변화를 보여준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제주에서는 그 비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울산, 경남, 경북, 충남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06년 17.2%에서 2019년 23.2%로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감소세가 관측되는데 행정기관 중심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한다.⁷⁾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별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의 상이한 변화를 활용한다.

6)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은 세전 금액이며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7) 임금 자료의 출처인 KOSIS 제공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 자료에는 세종시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그림1. 시도별 대기업 고용의 변화 (2006-2019)



주: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KOSIS, 2022)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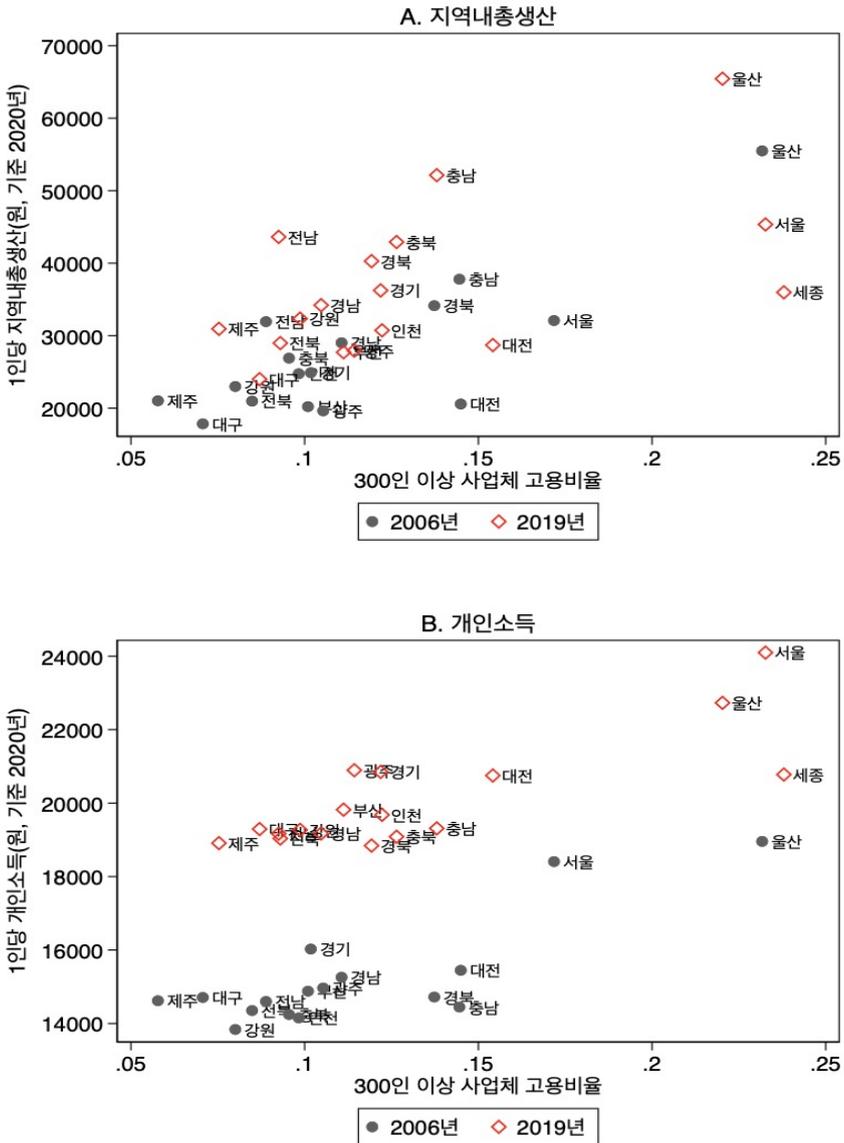
2) 대기업 고용과 소득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들이 성과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변수가 지역내총생산과 그 성장률이다. 여기서는 대기업 고용이 지역 노동시장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널리 사용되는 지역 경제 지표들인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우선 그림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기업 고용비율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개인소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⁸⁾ 그림 2-A는 2006년과 2019년의 각 시도별 대기업 고용비율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나타내는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 자료를 보면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앞에서의 대기업 고용비율의 변화 추세가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지역총생산도 두 시점 사이에 시도별로 상이한 변화가 관측된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관측되지만 그 크기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아울러 서울, 충북, 제주 등에서는 대기업 고용비율의 증가와 함께 지역총생산의 상당한 증가가 나타나고, 울산에서는 대기업 고용비율은 감소함에도 지역총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전남에서는 대기업 고용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지역총생산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생략된 대기업 고용비율과 1인당 지역총소득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8) 회귀계수의 t-통계량은 그림2-A의 경우 2006년 5.36, 2019년 2.56이고, 그림 2-B의 경우 2006년 5.27, 2019년 5.4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2. 대기업 고용비율과 지역내총생산 및 개인소득



주: 「지역통계」 및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KOSIS, 2022)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

그림2-B는 2006년과 2019년의 대기업 고용비율과 1인당 개인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두 시점 모두에서 양의 관계가 확인되는 점은 지역총생산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2006년 1인당 개인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과 개인들의 생활수준을 보다 잘 드러내는 개인소득 지표 사이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 고용비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에서 2019년의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표2에 보고한다. 각 모형은 시도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추가로 지역 노동시장 특성 변수인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경제활동인구 전문대졸이상 비율, 경제활동인구 15~29세 비율을 통제한다. 아울러 시도별 인구 및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도의 평균 경제활동인구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여기서 대기업 고용비율은 사업체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과 1,000인 이상 고용비율의 두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한다.

모형(2)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1,0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비율이 1% 증가할 때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모형(1)의 300인 이상 고용비율은 유사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지만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⁹⁾ 이 두 모형에서 실업률은 음의 관계를 보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비율은 양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만 여성비율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모형(3)과 (4)의 1인당 지역총소득에 대한 추정 결과는 두 대기업 고용비율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다른 설명변수들 중 실업률과 전문대졸 이상 비율의 음의 회귀계수와 청년비율의 양의 회귀계수는 통

9) p-값이 0.066으로 10%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다.

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5)와 (6)의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역시 회귀 계수의 크기가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역내총생산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2. 대기업 고용비율과 지역 소득

설명변수	종속변수: ln(1인당 생산 혹은 소득)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1)	(2)	(3)	(4)	(5)	(6)
대기업 고용비율(300+)	1.170 (0.590)		0.617 (0.431)		0.130 (0.185)	
대기업 고용비율(1000+)		1.346* (0.598)		0.559 (0.590)		0.063 (0.302)
실업률	-3.088** (0.975)	-3.130** (1.027)	-1.961* (0.728)	-2.019* (0.767)	-0.314 (0.567)	-0.340 (0.554)
경제활동 여성 비율	1.414 (1.059)	1.561 (1.030)	0.679 (0.697)	0.813 (0.719)	0.137 (0.244)	0.186 (0.262)
경제활동 전문대졸이상 비율	-0.357 (0.313)	-0.360 (0.312)	-0.778** (0.232)	-0.765** (0.228)	-0.313* (0.131)	-0.304* (0.125)
경제활동 15~29세 비율	2.865** (0.635)	2.906** (0.648)	1.866** (0.579)	1.851** (0.577)	0.232 (0.246)	0.216 (0.250)
연도 터미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항	9.135** (0.416)	9.136** (0.425)	9.808** (0.358)	9.796** (0.364)	9.665** (0.135)	9.658** (0.137)
R^2	0.9124	0.9123	0.9280	0.9274	0.9749	0.9748
관측치	224	224	224	224	224	224
관측 지역수	16	16	16	16	16	16

주: 광역시도 2006~2019년 패널 자료를 생성하여 시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측치를 제외함. 모든 회귀식의 추정치는 각 시도별 평균 경제활동인구를 가중치로 활용하고, 추가 설명변수로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경제활동인구 전문대졸이상 비율, 경제활동인구 15~29세 비율, 연도 터미를 통제함. *, ** 표시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Robust 표준오차를 괄호 안에 보고함.

표3. 대기업 고용규모와 지역 소득

설명변수	종속변수: ln(1인당 생산 혹은 소득)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1)	(2)	(3)	(4)	(5)	(6)
ln(300+ 기업 종사자수)	0.286** (0.067)		0.233** (0.044)		0.043 (0.030)	
ln(1000+ 기업 종사자수)		0.105** (0.034)		0.075* (0.028)		0.015 (0.017)
R ²	0.9273	0.9170	0.9395	0.9313	0.9755	0.9751
관측치	224	224	224	224	224	224
관측 지역수	16	16	16	16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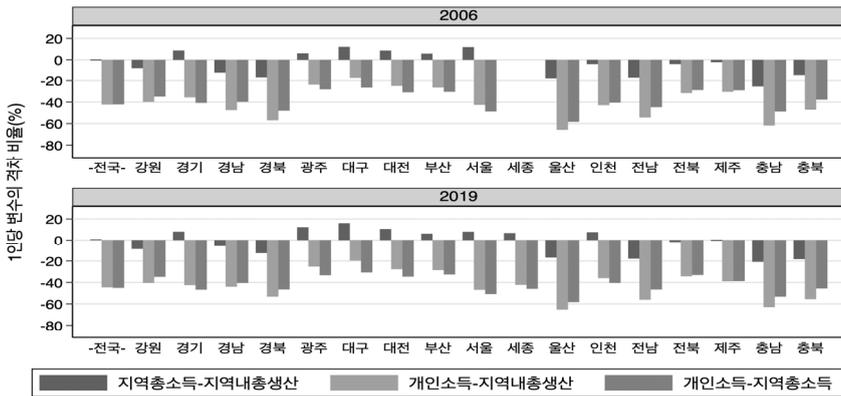
주: 광역시도 2006~2019년 패널 자료를 생성하여 시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측치를 제외함. 모든 회귀식의 추정은 각 시도별 평균 경제활동인구를 가중치로 활용하고, 추가 설명변수로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경제활동인구 전문대졸이상 비율, 경제활동인구 15~29세 비율, 연도 더미를 통제함. *, ** 표시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Robust 표준오차를 괄호 안에 보고함.

표3은 대기업 고용비용 대신에 고용 규모, 즉 대기업 종사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위와 유사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1)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종사자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0.3% 증가하고,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종사자수가 1% 늘어나면 약 0.1% 증가한다. 모형(3)과 (4)의 1인당 지역총소득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표2의 대기업 고용비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혀 대기업 고용 규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 간의 관계가 비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은 시도별로 2006년과 2019년 실질 1인당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지역총소득과 지역내총생산의 격차를 지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06년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에서는 지역총소득이 지역내총생산을 초과하여 역외유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산과 기타 도지역에서는 역외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¹⁰⁾ 지역총소득에서 정부소득과 기업소득을 제외한 개념인 개인소득과 다른 두 변수와의 격차는 시도별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경북, 울산, 전남, 충남 등에서는 개인소득이 지역내총생산의 50%를 하회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 개인소득과 지역총소득의 격차 역시 시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2006년과 2019년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변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시도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의 상호 격차



주: 「지역통계」(통계청 KOSIS, 2022)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 각 격차의 비율은 $100 \times (1인당 지역총소득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방식으로 계산함.

10) 정재준(2018)은 시군구 수준의 역외유출입 분석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순유출이 크고 서울 등의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순유입이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3) 대기업 고용과 임금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의 지역 경제 지표를 활용한 위의 분석과 달리 여기서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시도별 기업 규모별 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실질시간당임금과 대기업 고용비율간의 관계를 그림4에 제시한다.

그림3-A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11년과 2019년 모두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임금 수준도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전남의 경우 대기업 고용비율이 두 시점에서 모두 10% 정도로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¹¹⁾ 그림3-B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고용비율과 5~299인 중소기업 임금 수준의 관계도 유사하다. 2019년에 2011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두 시점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양의 상관관계도 확인된다.

11) 전남지역 대규모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 단지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4. 대기업 고용비율과 임금

설명변수	종속변수: ln(실질시간당임금)					
	기업규모 5~299		기업규모 100~299		기업규모 300+	
	(1)	(2)	(3)	(4)	(5)	(6)
A. 시도 및 연도 고정효과 포함						
대기업 고용비율(300+)	-0.760*		-2.116**		-1.208	
	(0.274)		(0.706)		(1.184)	
대기업 고용비율(1000+)		-1.173**		-2.519**		-2.358
		(0.361)		(0.804)		(1.341)
R^2	0.9480	0.9513	0.7271	0.7284	0.6751	0.6979
B. 시도와 연도 고정효과 및 추가 통제변수 포함						
대기업 고용비율(300+)	-0.434		-1.862**		-1.071	
	(0.219)		(0.606)		(1.184)	
대기업 고용비율(1000+)		-0.877*		-2.251**		-2.199
		(0.360)		(0.740)		(1.171)
R^2	0.9521	0.9544	0.7303	0.7325	0.7110	0.7277
관측치	144	144	144	144	144	144
관측 지역수	16	16	16	16	16	16

주: 광역시도 2011~2019년 패널 자료를 생성하여 시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측치를 제외함. 모든 회귀식의 추정치는 각 시도별 평균 경제활동인구를 가중치로 활용하고, 패널B의 추가 설명변수로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경제활동인구 전문대졸이상 비율, 경제활동인구 15~29세 비율, 연도 더미를 통제함. *, ** 표시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Robust 표준오차를 괄호 안에 보고함.

표4는 대기업 고용비율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2와 유사한 시도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대기업 고용비율이 지역 전체의 1인당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여기서는 더 나아가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에는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표4-A는 대기업 고용비율과 함께 시도 및

연도 고정효과만을 포함한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대기업 고용비율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으로 나타나며 특히 모형(1)~모형(4), 즉 지역의 중소기업 임금과 대기업 고용비율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4-B는 표2와 동일한 추가 통제변수를 포함한 추정 결과이다. 모형(1)에서 5~299인 규모 종사자의 실질 시간당임금에 대한 300인 이상 고용비율의 회귀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모형(2)에서 나타나듯이 1,0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비율이 1% 증가할 때에는 약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3)과 (4)에서 대기업 고용비율의 음의 임금 효과는 100~299인 중규모 기업 종사자의 실질 시간당임금에 대해 강하게 나타난다. 대기업 고용비율이 1% 증가할 때 설명변수에 따라 실질 시간당임금이 각각 1.9%,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모형(5)와 (6)에서 보고하듯이 대기업 고용비율이 기업 규모 300인 이상 종사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대기업 고용의 증가가 지역 내총생산에 미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의 그림4에서는 대기업 고용비율과 임금수준 간에는 직관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양의 관계는 시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통상적인 회귀분석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난다.¹²⁾ 그러나, 표4에서 보여주듯이 시도 고정효과를 도입하여 지역 내 변이(within variations)의 영향을 추정하는 경우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외유출입, 정부 및 자본소득의 크기 등으로 인해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으로 비

12) 표4의 모형(1)에서 시도 고정효과를 제외하여 추정하면 대기업 고용비율의 회귀계수는 2.12이며 t-통계량은 22.32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며, 나머지 모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이는 지역 간 변이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임금 수준도 유사한 관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평균 임금을 다루고 있으므로 대기업 고용 증가가 지역 내에 어떠한 고용 효과를 미치는지에 따라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¹³⁾

이상의 결과는 지역내총생산과 같은 주요 지역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과 달리 사업체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임금이 지역에서 대기업 고용 비율이 늘어날 때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2. 노동패널을 이용한 임금 효과 분석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시도별 평균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를 개인 수준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표5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노동패널 2009 통합표본에서 추출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세분화된 종사 사업체 규모 더미를 생성한다. 1~9인 규모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10~29, 30~99, 100~299, 300~999, 1000+ 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생성한다. 이 표본에서 종사자수 300~999 사업체와 1000+ 사업체의 비율의 합은 평균 21.3%로 앞서 살펴본 광역시도 패널 자료의 전국 비율 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의 시도별 자료는 전국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평균 상용노동자 수를 조사한 반면 노동패널은 개인들의 응답에 기초한 대한 조사 자료로 생성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대기업 고용 증가와 함께 창출되는 하청기업 및 서비스업 등 주변의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지역 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5. 노동패널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실질 시간당임금(만원)	52,025	1.321	0.942
기업규모 10~29	52,025	0.196	0.397
기업규모 30~99	52,025	0.170	0.376
기업규모 100~299	52,025	0.096	0.295
기업규모 300~999	52,025	0.065	0.246
기업규모 1000+	52,025	0.148	0.355
여성	52,025	0.410	0.492
나이	52,025	43.448	12.521
기혼(유배우자)	52,025	0.678	0.467
대졸이상	52,025	0.280	0.449
근속년수	52,025	6.223	6.905
정규직	52,025	0.632	0.482
노동조합 있음	52,025	0.151	0.358

주: 한국노동패널 2009 통합표본 2009~2019년 자료의 임금노동자 관측치들 중 변수 값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6의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자료를 활용함.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의 실질 시간당 임금은 약 1.3만원으로 나타나고, 여성이 41%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43.4세이다.¹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비율이 약 68%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가 28% 정도로 나타난다.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약 6.2년 정도이고 약 63%가 정규직이며 약 15%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14) 여성 더미와 연령 변수는 개인별로 연도에 따른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크기의 변화를 보이는 변수로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생략된다.

이 있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은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임금 효과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각 모형은 혼인상태, 학력,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종, 산업의 개인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고 연도 및 지역 더미를 포함한다. 모형(1)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준거 집단인 1~9인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에 비해 10~29인 사업체에서는 3.5%, 30~99인 사업체에서는 6.3%, 100~299인 사업체에서는 7.3%, 300~999인 사업체에서는 7.9%,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주영 외(2008)에서 추정한 임금 효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모형(2)는 지역 노동시장 고용 구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의 현 직장 규모 더미 변수들을 제외하고 현 직장 소재 지역(광역 시도)의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을 주요 설명 변수로 포함한다. 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이 1% 증가하는 경우 개인들의 임금은 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의 부정적인 임금 효과는 모형(3)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개인들의 현 직장의 규모 더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회귀분석에서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는 값들과 일관되게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임금이 높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정규직 노동자,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근속년수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2)와 (3)에서 확인되는 지역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의 부정적인 임금 효과가 개별 노동자의 직장 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4)에서는 현 직장 종사자 규모 더미 변수들과 지역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비율 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추정한다. 앞서 살펴본 광역시도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형(4)에서는 종사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차항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개인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지역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의 증가는 개별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지역 대기업 고용비율의 임금 효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ln(실질시간당임금) (FE)			
	(1)	(2)	(3)	(4)
기업규모 10~29	0.0351** (0.005)		0.0352** (0.005)	0.0522** (0.016)
기업규모 30~99	0.0632** (0.007)		0.0631** (0.007)	0.0661** (0.019)
기업규모 100~299	0.0727** (0.008)		0.0727** (0.008)	0.0756** (0.022)
기업규모 300~999	0.0786** (0.009)		0.0785** (0.009)	0.0836** (0.026)
기업규모 1000+	0.0945** (0.008)		0.0944** (0.008)	0.0775** (0.023)
지역 대기업 고용비율(300+)		-0.8134** (0.227)	-0.8018** (0.227)	-0.7834** (0.236)
기업규모 10~29*고용비율(300+)				-0.1218 (0.111)
기업규모 30~99*고용비율(300+)				-0.0221 (0.128)

지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고용 변화의 임금 효과

기업규모 100~299*고용비율(300+)				-0.0215 (0.144)
기업규모 300~999*고용비율(300+)				-0.0368 (0.166)
기업규모 1000+*고용비율(300+)				0.1105 (0.147)
기혼(유배우자)	0.0432** (0.009)	0.0434** (0.009)	0.0437** (0.009)	0.0437** (0.009)
대출이상	0.1025** (0.027)	0.1119** (0.028)	0.1038** (0.027)	0.1039** (0.027)
근속년수	0.0123** (0.001)	0.0129** (0.001)	0.0124** (0.001)	0.0124** (0.001)
근속년수 ² /100	-0.0227** (0.005)	-0.0237** (0.005)	-0.0230** (0.005)	-0.0230** (0.005)
정규직	0.0778** (0.008)	0.0806** (0.008)	0.0784** (0.008)	0.0784** (0.008)
노동조합	0.0282** (0.007)	0.0423** (0.007)	0.0284** (0.007)	0.0282** (0.007)
직종, 산업, 지역, 연도 더미 상수항	Yes -0.2050** (0.069)	Yes -0.0006 (0.084)	Yes -0.0338 (0.082)	Yes -0.0369 (0.082)
R^2	0.2089	0.2046	0.2093	0.2093
관측치	52,025	52,025	52,025	52,025
관측인수	9,527	9,527	9,527	9,527

주: 한국노동패널 2009 통합표본 2009~2019년 자료를 활용함. 각 회귀식의 추정치는 개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함. *, ** 표시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Robust 표준오차를 괄호 안에 보고함.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변화를 기업 규모에 따른 종사자수 및 고용비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광역시도 패널 자료의 실증 분석 결과는 대기업의 지역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기업 고용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 혹은 지역총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개인소득으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시도별 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기업 고용비율의 증가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가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면 단순한 기업 투자의 유치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보장하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외에도 임금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향상과 자영업 등 기업에 고용되지 않는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 수준의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지역 대기업 고용비율의 긍정적인 임금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고용비율의 증가가 오히려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시도 패널 분석과의 차이점은 개인 패널 분석에서는 지역 대기업 고용비율의 음의 효과가 개인들의 현 직장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적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존재하고 대기업 일자리의 증가는 이직 및 취업을 통해 고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개인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임금격차를 통제한 후에 발생하는 임금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주상영(2013)과 주상영·전수민(2014)의 논의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인다면 광역시도 패널 분석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개인소득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과 개인 패널 분석의 부정적인 임금 효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고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은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 증가가 선순환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 혹은 자영업자 사업성 증대, 그리고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고용 효과 및 그 파생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 김주영·조동훈·이변송·조준모·이인재. (2008).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김우영. (2012).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1-28.
- 문영만. (2019).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42(1): 43-72.
- 이종수. (2017).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2): 143-171.
- 정재준. (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21~334.
- 조동훈. (2009). 패널 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분석. *노동정책연구*. 9(3): 1-27.
- 주상영. (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19(2): 151-182.
- 주상영·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31-65.
- 허식. (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1): 1-16.
- Brown, C. and Medoff, J. L. (1989). The Employer Size-Wage Effe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027-1059.
- Dunne, T. and Schmitz, Jr., J. A. (1995). Wages, Employment Structure and Employer Size-Wage Premia: Their Relationship to Advanced-technology Usage at US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Economica*, 62(245): 89-107.
- Garen, J. E. (1985). Worker Heterogeneity, Job Screening, and Firm

Siz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4): 715-739.

Oi, W. Y. and Idson, T. L. (1999). Firm Size and Wages. in Ashenfelter, O. C.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C: 2165-2214. Elsevier Science B. V.

Manuscript: Oct 22, 2022; Review Completed: Nov 14, 2022; Accepted: Nov 16, 2022